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2025. 06. 18. WED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Program

10:00~10:20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20~10:25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참석자
10:25~10:55	발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
10:55~11:45	토론	좌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패널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
11:45~11:50	폐회	

Contents

개회사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패널〉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입니다. 오늘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에 대한 통찰을 지니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산업금융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신 박홍배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기영 교수님, 박창균 선임연구위원님, 허석균 교수님, 원승연 교수님 등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논의가 오늘 토론회의 깊이를 더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발 통상 압력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술 주권 확보,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종합적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R&D, 규제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산업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이 다시금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력과 산업 자립성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없이는 국가 제조기반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역동성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체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금융 체계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점차 약화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주의 기능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위험·장기 분야인 첨단기술 및 인프라 투자 영역에는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기관 간 기능 중복,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운용 방식 등도 정책 금융자원의 비효율성과 정책목표 간 괴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나 기능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책금융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간의 전략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금융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는 산업 전환기에 직면한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정책금융의 구조적 전환은 지역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화 분야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소기업 대상 종합 금융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산업의 활력과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산업 금융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 산업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제언이, 향후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조정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정책적 통찰과 실천적 대안이 만나는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8.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기 식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발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한 상 범

경기대학교 교수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25. 6

한상범(경기대) · 심명화(명지대)



I. 서론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국가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의 자국생산주의(Localization)로 인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한 금융지원체계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하여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
 - 재정건전성 우려로 재정 지원을 통한 산업정책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 외환위기 이후 정책금융의 산업정책 기능이 퇴색 / 중소기업 및 가계를 위한 지원 기능 위주로 집행되고,
 - 정책금융의 중복 및 과다 지원 및 비효율성 등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2

I. 서론

- 본 연구는
 - 정책금융체계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 정책금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
- 핵심 개편 방안: “산업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을 하나의 **지주회사 내로 편입**”
 - 가칭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회사(기존 정책금융기관) 간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
- “**투자 전담 정책금융기관**”과 “**지역 소기업과의 관계금융을 위한 지역정책금융기관**”의 신설도 제안

3

II. 배경: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부활

1. 국제환경의 변화

▪ 국제통상 질서의 해체와 보호주의 대두

- 개방적 자유무역 질서의 해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세 전쟁, 수출입 및 투자의 제한
- **자국생산주의(Localization)**
자국 내 제조업 보호 및 고용 확대,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
- **경제 안보**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 미·중의 세계 주도권 경쟁 심화

▪ AI 및 기후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

- **AI 기술혁신**은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
AI 기반 제품·서비스 경쟁력, AI에 의한 생산과정 전환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제고, AI 기술을 둘러싼 공급사슬 체계의 전환과 그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구조의 전환이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 유인으로 작용
새로운 글로벌 공급사슬 체계로의 성공적 진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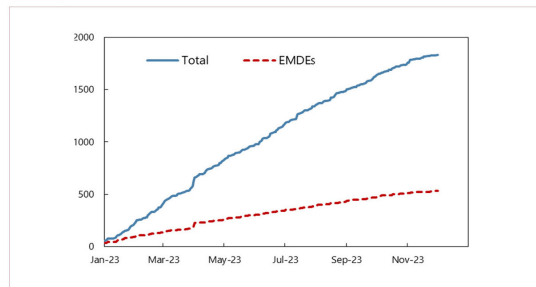
4

II. 배경: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부활

2. 산업정책의 부활: 국제적 동향

- 다수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산업정책을 **매우 한정적인 영역**에 국한하여 집행하여 왔음
 - 산업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산업 및 경제적 활동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구조를 변형 시키려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정부의 정책
 - 원론적으로 **시장실패 영역**에 정부가 개입
- 그러나 최근 **선진국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Evenett et al, 2024)
 - 2023년 새로 집행된 산업정책 2,500여 개 중 선진국(AE) 비중 70.9%, 이머징국가(EMDE) 비중 29.1%

그림 2-1 새로 집행된 산업정책 수



주: EMDEs는 이머징 국가이고, Total은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을 모두 포함
자료: Evenett 외(IMF, 2024)

5

II. 배경: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부활

2. 산업정책의 부활: 국제적 동향

-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은 재정지출이나 조세 등을 통한 **재정정책** 아니면 금융지원을 통한 **금융정책**임
 - 산업정책은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기업 성과 지원, 산업 생태계 개선, 수요 견인으로 구분(Crisuolo et al, 2022)

목표	방법	세부 수단
기업 성과 지원	투자 유인 제공	재정 지출, 금융 지원
	요소 투입 지원	교육 및 훈련, R&D, 인프라 공급
산업 생태계 개선	제도 설계	자본시장 발전, 조세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각종정책(기업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등)
수요 견인	규제 및 유인 제공	생산물 규제, 공공 조달 등

-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기업 성과를 목표로 한 직접적인 지원**
 - 산업 생태계 개선이나 수요 견인을 통한 산업정책은 시장의 대응에 따라 그 효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계

6

II. 배경: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부활

2. 산업정책의 부활: 국제적 동향

- 각국은 **재정건전성**이나 **금융시장의 규모·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금융시장의 충분한 여력을 감안하여 **금융지원보다는 재정 및 조세**를 통한 지원에 집중
 - 반도체, 에너지, 전략적 광물 등 주요 미래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주로 재정 및 조세 지원 법령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
 - 유럽: 재정건전성의 우려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활용도가 높음**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미약하여, 경기 활성화 및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정책을 실시 (European Green Deal(2019) 등)
 - 미국과 달리 금융시장의 위험자본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험성 높은 인프라 혁신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위험공유 프로그램을 마련(InvestEU 등)

7

III. 금융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1. 금융지원체계와 정책금융

- 한국의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가계 지원 중심**
 - 한국의 정책금융체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형성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책금융 전달체계는 일반은행 중심으로 전환
 - 이 과정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직접적 금융지원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중소기업·가계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확대

표 3-1 정책금융의 유형

유형	정책금융기관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가계금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내 투자 조직, 한국벤처투자(KVIC), 한국성장금융

[참고] 2023년 여신 기준,

- 전체 금융시장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41.7% 내외로 높은 수준(특히 보증 비중은 92.3% 이상)
-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계 정책금융 비중이 상승 (정책금융의 약 33.7%가 가계지원)
- 다수의 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 (기업 정책금융 중 중소기업 비중은 60% 상회)

8

Ⅲ. 금융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2.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정책금융이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1) 정책금융이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 (2) 기술혁신이나 인프라 투자 등 고위험·장기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제한적
- (3) 정책금융기관 간의 업무가 중복되고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도 발생
- (4) 주로 우량기업에 집중되고 혁신기업·소기업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정책금융 기능이 저하
- (5) 정책금융이 지역별 산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어,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약화

9

Ⅳ.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1. 개편의 기본 방향

- 과거의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효과는 제한적
 - (1) 정책금융기관 자체적 내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업무 개선, (2) 정책금융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통폐합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성과가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관련자에 의한 대리인 문제에 비롯한 것으로 판단

임직원

- 업무조정 및 통폐합에 따른 기존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반대
-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업무 영역 및 규모 확대

감독
부서

- 정책금융기관의 소관 부처가 각각 달라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여 통폐합에 소극적

지역

- 공기업 지방 분산 등과 관련하여, 통폐합 문제가 지역의 반발이나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

표 4-1 정책금융기관과 감독 부처

정책금융기관	정부 부처	관련법령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10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정책금융기관 개편 전략은 정책금융지주회사(가칭)의 설립

-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 Top-Down 방식의 개편 전략**
 - Bottom-up 방식의 미시적 개편보다 **개편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
 - 부분적인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처의 반발 및 소극적 자세를 해결하기 어려움
 - **산업정책 목적**의 기능이 상당수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
 - 3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시의성을 감안할 때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개편 방안**
 -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산하에 두고 업무를 통제 → **통폐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반발을 최소화**
 - 부처가 달라서 발생하는 정책적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및 자금의 효과적 통제**
 - 정책금융지주회사가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 → 중장기적으로는 산하 지주회사의 업무 조정, 통폐합도 실행 가능

11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2. 해외 사례 : 독일 KfW

- **KfW는 독일의 정책금융기관**
 - 연방정부가 80%, 16개 주가 20%의 지분을 보유(특별법을 적용받는 비과세 공공기관)
 - 연방장관, 주정부, 정당, 금융, 노동계 대표 등 37명으로 구성된 감독이사회가 경영진(집행이사회)을 임명하며, 감독이사회 의장은 연방 재무장관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교대로 수행



- **정부 정책에 따라 기능을 전환**
 - 제2차 세계대전 후(인프라 복구, 주택 건설, 산업 재건), 독일 통일 이후(동독 지역 투자 지원), 1990년대 이후(환경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2000년대 이후(디지털화와 혁신금융 확대) 등
 - 최근에는 '탄소중립 전환'을 최우선 순위로 함
- **독일 정부는 KfW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분사하여, 정책 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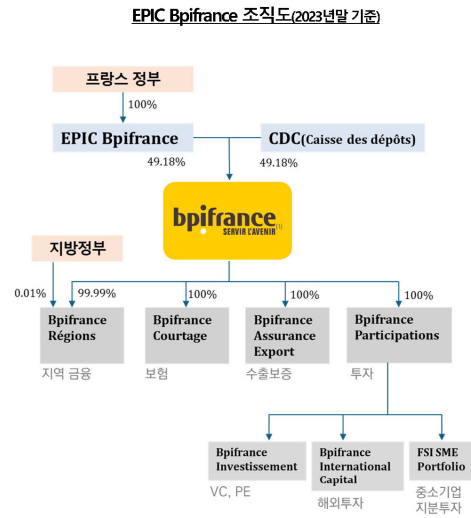
KfW의 주요 자회사	
KfW IPEX-Bank	2008년, KfW의 국제금융부문을 분사(상업은행) - 수출입 및 프로젝트 금융 담당
DEG	1962년, 개발도상국·신흥국의 민간부문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개발금융기관 2001년에 KfW그룹으로 통합
KfW Capital	2018년, KfW가 벤처투자 관련 정책펀드를 운용할 자회사로 설립(유한책임회사) - HTGF(High-Tech Gründerfonds), Future Fund(Zukunftsfonds) 등 연방정부의 정책펀드를 운용

12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2. 해외 사례 : 프랑스 Bpifrance

- 프랑스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여 'EPIC Bpifrance'를 설립
 - 2012년, 중소기업 지원기관(Oséo), 예금공탁공사(CDC Entreprises), 전략투자자금(FSI), 지역투자기관(FSI Régions) 등을 통합하여 설립
- 'EPIC Bpifrance'의 미션은 'France 2030'과 같은 국가 성장 전략의 실행
 - (1) 기술혁신과 이전의 촉진, (2) 중소기업 지원, (3) 수출 금융과 해외 투자 지원을 주요 미션으로 함(EPIC Bpifrance, 2023)
 - EPIC Bpifrance의 CEO는 대통령이 임명(이사는 관계 부처에서 겸임)
- Bpifrance SA는 EPIC Bpifrance와 CDC가 공동 주주(지분 각 49.18%)
 - Bpifrance SA의 집행이사회(15명)는 재무부, 예산부, 산업부, CDC, 지방정부, 직원 대표로 구성되고, CEO는 대통령이 임명함
- Bpifrance SA를 중심으로 기능별 자회사 체제



13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2. 해외 사례 : 시사점

- 정책금융의 Flexibility:**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정책목표 변경에 적시에 대응하는 정책금융체계 확보
 - 일괄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 정책금융기관이 다른 정부부서에 속해서 발생하는 정책금융 조정의 경직성을 탈피
 - 독일: KfW 중심의 분사 및 합병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책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업무 확대 :** 산업정책 목적의 중장기적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확충
 - 프랑스: Bpifrance의 투자업무 자회사 내에 손자회사를 만들어 투자 업무 실행 (벤처투자, 해외투자, 중소기업투자 등으로 손자회사 구분)
- 지역금융 지원의 강화**
 - 독일: 주법은행을 통한 지역금융 공급
 - 프랑스: 지방정부와 합자 형태의 지역금융기관 설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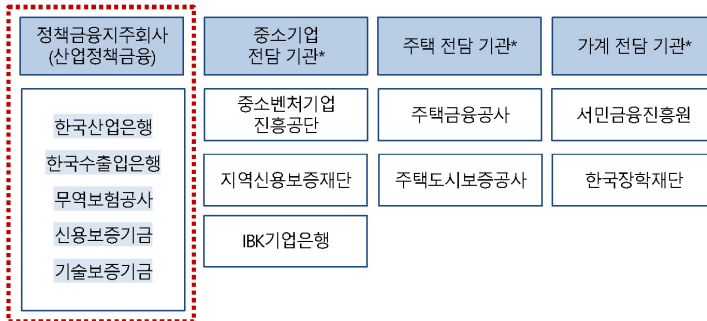
14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3.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보유한 정책금융기관을 **정책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편입

- 대상: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지주회사의 포괄 규모(2020년 기준): 전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공급액의 34.8%
(단, 정책금융 중 한은자금 및 재정자금 대출액은 제외한 수치임)



* 중소기업 전담/주택/서민금융 정책금융기관은 지원 방식 및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립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유지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기업은행을 민간은행으로의 전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

15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3.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영위원회** 설치

- 정책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방향 및 업무 관리감독, 정부 예산의 배정 등을 담당
- 경영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및 각 관련 부처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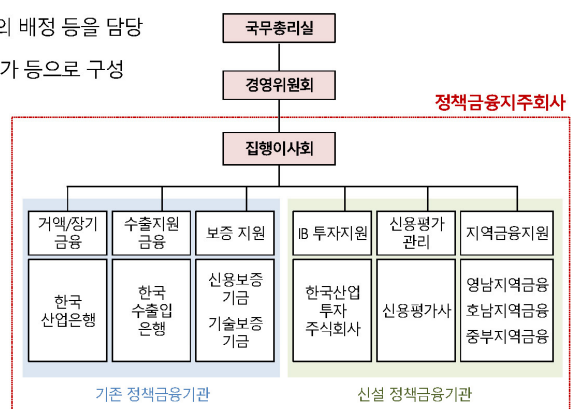
■ 정책금융지주회사 사장은 **총리실 추천, 대통령 임명**

- 산하 자회사는 정책금융지주회사 사장 추천
(경영위원회 경우), 총리 임명

■ 집행이사회는 **사장(CEO), 집행이사, 사외이사로 구성**

- 집행이사 및 사외이사는 사장 추천으로 총리 임명
- 지주회사 경영 방향 설정, 자회사 자금 배분 및 관리, 자회사 간 업무 조정 등을 담당

정책금융지주회사 구조



16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3.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편입 방안

- | | |
|---|--|
| (1)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장기금융 → 산업은행 • 수출입금융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 보증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
| (2) 자회사 중복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금융의 조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 수출입 관련 보증 업무의 조정 및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 국내 보증업무의 조정 및 통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
| (3) 산업정책 지원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업무 축소 (특히 중기업 지원 업무 축소) • 각 지역의 소기업 지원 업무는 신설 지역 정책금융기관에 이양 |

17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3.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 신설 정책금융기관 1: (가칭)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

- | | |
|-----------------|--|
| (1)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적인 정책금융 공급의 주도적 역할 수행 • 기존 산업은행 내 투자 업무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여신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업무를 활성화 |
| (2) 설립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내 투자 부서를 중심으로 지주회사내 자회사로 설립 • 구성: 산업은행의 IB 및 투자 부서(직접투자)와 성장금융(간접투자)으로 조직화 (성장금융은 투자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
| (3) 주요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적인 정책금융 공급 • 위험자본 공급이 요구되는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 자금공급 • 위험공유를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인 |

18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3.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 신설 정책금융기관 2 : 지역 정책금융회사

(1) 목표

- 지역에 특화된 관계금융형 지역 정책금융의 공급과 배분
- 기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금융서비스** 기능 제공
(자문, 대출, 보증 및 투자 관련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

(2) 설립 방안

- 지주회사 내 3개 광역권을 기준으로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
- 영남지역금융 / 호남지역금융 / 중부지역금융(충청 및 강원)

(3) 주요 기능

- 지역산업 발전: 지역에 특화된 산업 지원
- 중소기업 중 **소외된 소기업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지역기업 지원의 연계 체계 수립: 대규모 자금 필요시 중앙의 정책금융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망 수립

19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4. 세부 개편 방안

■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원칙

효율성

-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과다 및 중복 업무 조정
- 전체 정책금융체계의 효율성 개선

전문성

- 각 정책금융기관 기능의 명확화
- 각 금융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정책금융을 공급, 관리하는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통합성

- 정책금융지주회사가 산업정책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회사의 기능을 통합 관리
-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주회사 조직을 설계

20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4. 세부 개편 방안

■ 정책금융기관별 업무 조정 방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

- 방향: **산업정책 정책금융의 주도적 기관**으로서 발전
- 거액의 장기 산업정책 정책금융 공급 기능에 집중
 - 온렌딩 대출 등 중소기업 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정책금융 업무 폐기
- 산업은행의 투자 부서 및 자회사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가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업무** 실행
- 보험사 등 비정책금융 자회사는 조속히 매각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 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를 조정하여, **수출입은행이 수출 관련 금융업무 전담**
 - 단, 장기의 거액 여신 업무의 경우 한국산업은행과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체계 마련 필요
- 무역보험공사는 **신용보험 이외 수출관련 보험 업무 전문 기관으로 개편**
 -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험 업무는 축소하여 수출입은행이 무역 관련 보증 업무를 전담
- 중장기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통합 실행

21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4. 세부 개편 방안

■ 정책금융기관별 업무 조정 방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
 - AI 및 I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최근 양 기관의 보증 업무 중복 해소
- 산업정책 차원의 보증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개편
 - 산업정책과 무관한 중소기업 보증 업무를 축소

지역 정책금융회사

- 관계금융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설
 -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여신 뿐만 아니라 **자문** 업무도 병행
- 지역·소기업 중심의 지원
 - 산업정책과 무관하게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높은 소기업(50인 이하 기업)**이 주 지원대상
 -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지원의 경우 **여타 정책금융기관과 연계**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 기능
 - 일정 금액 이상의 여신액을 대상으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
- 정책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총 여신한도를 관리
 - 각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액 관리를 통해 중복 여신을 통제
 - 지주회사 전체적인 자금공급 효율성 제고

22

IV.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5. 정책금융지주회사 수립을 위한 실행 계획

- | | |
|----------------------------|--|
| (1) 지분의 정리 및 자금조달 구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회사에 투입된 재정자금을 기초로 설립 -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을 통합하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지주회사가 100% 자회사 지분 소유하도록 지분 정리 • 단 자본금을 늘릴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기업은행 지분의 매각(민영화)을 검토 - 각 정책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조달 구조는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령 신용보증기금의 민간출연금은 지속 |
| (2) 법안 마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특별법 마련 - 이와 동시에 개별 정책금융기관 관련 법안을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용 등을 일부 개정 |
| (3) 업무 조정과 통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책금융기관 별 업무 조정은 지주회사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 지주회사 체제 이후의 성과를 기초로, 통폐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

23

감사합니다

24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박 홍 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Memo

Memo

Memo

Memo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박 수 민

국회의원(국민의힘)

Memo

Memo

Memo

Memo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박 창 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5. 6. 18.

박 창 균
(자본시장연구원)

1

산업정책: New vs. Old

	전통적 산업정책	신산업정책
목표	경제발전/수입대체	국가 경쟁력, 혁신, 지속가능성 제고
대상	특정 산업 (주로 제조업이나 중공업)/기업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economic security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sector)
접근법	Top-down/interventionalist	시장친화적: 경쟁을 통한 혁신 강조
정책 수단	국내시장보호, 세제혜택, 국영기업, 보조금, 금융지원	위험공유(PPP), R&D 지원, 규제개혁
사례	주로 개발도상국	선진국 중심

2

신산업정책의 지원 수단

- Subsidies/Grants
- Tax incentives
- Public investment funds
- 융자/보증
- Venture (capital) support
- Procurement and market shaping tools

- 지원 원칙
 - Object-oriented
 - Targeted
 - Risk-sharing 강조
 - Sector/task rather than individual firms or industries

3

정책금융의 문제: 명확하지 않은 정책목표

- (중소)기업지원 → 경제 발전 → 국가경제/국민에 혜택
 - 개입에 대한 논리구조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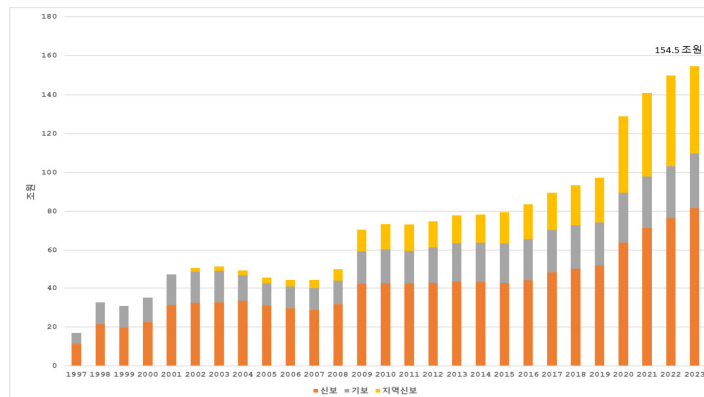
목적		업무
산업은행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 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1. 산업의 개발·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여信的 할인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인수·보증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운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2.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융자, 투자, 사채인수, 보조금 지급 등

4

정책금융의 문제:책무성 (Accountability) 부재

- 정책의 책무성 담보 장치가 사실상 부재
 - Policy intervention - performance measurement - feedback cycle 부실
 - 정책금융을 둘러싼 유인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지원규모 지속 증가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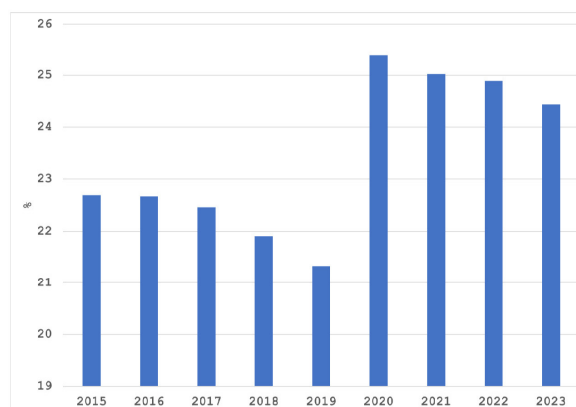


5

정책금융의 문제:금융시스템 왜곡

- 정책금융,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의 지속 확대는 금융시스템 왜곡의 토양
 -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1/4 가량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제공
 - 중소기업의 신용제약 완화 vs. 중소기업 금융부담 보조

은행대출금 중 정부 보증 비율



6

정책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 Mammoth급 규모의 정책금융지주회사에서 예상/우려되는 문제점
 - 관리의 편의성은 예상되나 자회사 간 synergy가 존재하는가?
 - 부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는가? -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모색 필요
- 정책금융 지형에서 책무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 “중소기업정책금융지주회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 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 중진공/소진공 직접 대출, 신보, 기보, 지역신보, 각종 중소기업 투자 facility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설립 검토
 - 지주회사에 대하여 금융지원의 총액을 부여(국회?, 예산당국?)하고 준수하도록 요구
 - 총액한도 내에서 지원 수단별 자금 배분은 지주회사 경영진이 결정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허 석 군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허석균(중앙대)

2025. 6.18

I. 개선의 필요성

-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부문에 여신을 제공하는 선별적 자금배분 정책으로 1960년 대 이후 다음의 3 영역에서 꾸준히 시행되어 옴.
 - ① 중소기업
 - ② 서민(소상공인), 주택 금융
 - ③ 산업정책
- 상대적으로 위축된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역할의 기대는 높아지는 상황
 - 변화한 정책환경과 기존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비판
 - 과거의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또는 개편 시도에 대한 불만족

2

II. 개선방안의 타당성

- 불가피한 Top-down 방식
 - (컨트롤 타워)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설립
 - 이를 통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부처로부터의 독립
 - 일관된 관리와 업무영역 조정이 가능
- 투자중심의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할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의 설립
 - 대출/보증 편중을 완화
 - 다만, 자체자금조달 원칙을 이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제 역할을 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듯

3

III. 새로운 산업정책 정책금융체계(안)에 바라는 점

- 모험자본 전문 정책금융기관의 별도 설립(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의 자회사)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민간 VC의 빈 틈을 메꿔줄 필요
 - 국내VC펀드의 영세규모와 후속투자 자금부족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초기 VC자금 상환 이후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예: 바이오 산업)
 - 포용적 금융, ESG 등 신규 정책영역 및 VC 조정기 세컨더리 펀드 결성 지원 등 관련하여 일정 역할을 기대
- 모험자본 전문 정책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자원 확보는 필수 (모회사인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나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역량은 충분(?))
 - 모험자본 투자 전문 국부펀드의 설립
 - 물론 자원조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4

III. 새로운 산업정책 정책금융체계(안)에 바라는 점

- (추가적으로) 시장의 실패 vs. 시장참가자의 실패의 구분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응자프로그램 사례
 - ✓ 해외자원개발투자사업 참여를 늘렸는가? (Yes)
 - ✓ 효과적인 해외자원 확보수단이었나? (...)
 - 모험자본 방식의 지원 영역 및 단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의 실패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산업금융지원
체 계 개 선
정 책 토 론 회

토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원 승 연

명지대학교 교수

Memo

Memo

Memo

Memo